

學科의 分化가 大學의 長期發展에 유리하다

金 性 淬

(서울大 農業敎育科)

1. 머리말

현재 대학 사회 일각에서는 대학 학부 학과의 통합·분화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이 발전하려면 학과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분화하는 것이 나은가에 대한 의견 중 분화론을 찬성하는 방향으로 논지를 펴 달라는 편집자의 연락이 있었다.

발등에 떨어진 일들도 못다 해서 절절메는 처지에 논쟁에 뛰어들고 싶지도 않았고 또 '분화론자'로 분류되어 선·후배 동료 교수들의 눈총을 이겨낼 자신도 없어 사양했었다. 그런데 편집자의 사정이 매우 난처하다는 것이다. '통합론'에 찬성하여 지상토론을 해 줄 사람은 많았는데 '분화론'을 지지하여 원고를 쓰겠다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大學敎育」지

의 지상토론판이 대학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좋은 기회임을 부정할 수도 없는 처지인데다 통합론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선진국의 경향이라며 대부분 통합론에 터하고 있는 이때 '극소수'인 분화론을 지지하는 일은 위험스럽다는 생각이 안 든 것은 아니었으나 편집자의 의도를 살리고 또 소수의 의견이 표출될 필요도 있다는 마음으로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2. 教育改革審議會와 學科 改編

우선 통합론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필자를 통합론의 반대자 또는 분화론자로 규정하지 마시기 부탁드린다. 거듭 말하지만 어느 한편에 분류되기를 싫어하고, 제한된 시간·자료·경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필자는 통합 또는 분화론의 입장에 서기 이전에 지난 1985년 3월 발족한 이후 1987년 12월까지 우리 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당면 과제의 개선뿐 아니라 21 세기를 지향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교육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온 교육개혁심의회에 경의와 찬사를 보내고자 한다.

학계·교육계·사회계·경제계·언론계·과학계·문화계 인사 32인으로 구성된 위원과 대학 교수, 연구원, 초·중등 교원으로 구성된 정수 20인의 전문위원을 비롯한 사무국, 연구원, 운영위원, 기획 조정 실무위원, 특별위원회 외에도 수백 명의 연구 참여자, 공청회 발표 및 토론자, 공개 토론회

몇 세미나 참여자, 전문가 협의회 참여자, 관련 기관 협의회 참여자들의 3년 동안에 걸친 노력의 결과로 보고된 “21세기를 향한 한국 교육”(교육개혁심의회 최종보고서 Ⅲ, 1987. 12)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한다. 특히 ‘세계 수준의 대학교육’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크기 때문에 대학의 발전을 위해 간략하게나마 요약하고자 한다.

동 보고서는 대학교육을 양적 팽창으로부터 질적 발전으로 전환시키고, 대학의 자율·자치 능력 배양을 통하여 특색 있는 발전을 유도하여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각 대학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을 분담하면서 독자적인 유형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특성화를 추진한다.

둘째, 대학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학 평가 인정 제도를 정착시키고 학위의 사회적 공신력을 재고한다.

세째, 우리나라 대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하여 교육 연구 여건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도록 한다.

네째, 대학이 국제화 시대의 면모를 갖추고 세계의 우수한 대학들과 어깨를 거루기 위하여 지역 연구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학술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대학들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등은 물론 대

학의 전반적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한다.

여섯째, 대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대학들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산업체나 타 연구 기관과도 공동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제안하고 있는 대학교육 개혁의 방안들에 학부 학과의 통합 또는 분화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필자에게 안도감을 준다. 학과의 통합 또는 분화 논의가 ‘세계 수준의 대학교육’을 위한 핵심적 문제가 아닌 것이어서 이번 토론의 분화 논의 때문에 대학 발전이 저해되지 않으리라는 흐름 가분함 때문이다.

한편, 같은 해인 1987년 12월 말 발간된 교육개혁심의회 최종보고서 Ⅱ “교육개혁종합구성”은 앞서 언급한 보고서 Ⅲ보다 분량으로 보아 4~5 배 되는데 Ⅳ-1-라-1항에서 학과의 개편·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고등교육은 단계별 학문 연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를 재조정한다.

가) 산업 사회의 요구와 전문대학은 특성에 맞는 전공 학과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전문대학의 전공 학과 명칭과 교육과정 등이 실업고등학교나 4년제 대학과 구별되게 한다.

나) 대학의 학부에 설치된 학과들은 교육과정 측면에서 적합성을 재검토하여 유사 학과를 통·폐합 조정하고, 학부 학

과로서 부적합한 학과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 학과로 전환한다.

다) 대학원 교육의 이념과 목적에 비추어 석·박사과정이 설치되어야 할 학문 분야를 선별하여 학문의 성격상 대학원 과정에 적합한 학과들만 존치하도록 하고, 대학원 학과내에서의 전공의 설치는 각 대학(교)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어쩔 수 없이 분화론의 입장에서 토론해야 하는 필자라 할지라도 위 나) 항의 ‘유사 학과의 통·폐합 조정’ 주장은 여기에서 정식 반대할 용기는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학계는 물론 교육계·사회계·경제계·언론계·과학계·문화계 인사들의 광범위한 경험과 연구의 소산으로 필자 또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다만 유사 학과의 통·폐합이 유사 학과들의 재학생, 졸업생, 교수, 학과장 선에서의 자율적인 통·폐합이어야 한다는 정도의 방법론만을 첨언하고자 한다. 해당 유사 학과의 자율이 아닌 대학 또는 대학내의 특별위원회, 학장·총장·문교부 등의 타율적인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의 혼란은 요즘 문제되고 있는 언론 통·폐합보다 더 많은 파문을 몰고 올 가능성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3. 分化·成長의 根據

거의 대부분의 생물들은 세포의 분화에 의해 성장한다. 세

또는 하나 또는 두 가지의 아주 정밀한 기능을 수행한다. 생물은 자신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여러 종류의 세포에 기능을 분담시킨다. 이러한 분담의 과정을 분화(differentiation)라 부른다. 세포(cell)가 분화되어 조직(tissue)이 되고 이 조직들이 모여 기관(organ) 또는 기관계(organic system)이 된다. 예컨대 식물의 뿌리 세포가 신장·분화되어 특수한 구조를 형성하는데 뿌리 표면 세포는 표피 세포로 분화되고 이들의 대부분은 길어져 뿌리 털이 된다. 이 뿌리 털은 표면적을 넓히며 뿌리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물을 흡수하여 식물을 성장하게 한다. 사람의 경우도 계속적인 세포의 분화로 성장하게 되며 어른의 몸은 6×10^{13} 개의 세포로 분화한 상태인 것이다. 이처럼 세포의 분화는 동·식물계 성장의 자연적인 현상인 것이다. 또한 아무리 화목한 집안의 의좋은 형제들도 성장하여 결혼하면 분가하여 독립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류 역사의 과정이었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도 해방 당시인 1945년엔 19개교의 8천 명에 불과했던 학생이 1955년에는 74개교 85,000 명으로 다시 1970년에는 152개교 163,500 명, 1980년에는 224개교 565,000 명이던 것이 1987년에는 233개교 1,270,000 여명으로 세포 분화되듯 급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대졸자에 대

한 수요 증대로 인하여 양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대학 수의 증대, 대학생 수의 증대, 학과 수의 증대 등은 이러한 변화의 일부이다. 양적 성장에 따른 우수 인력의 배출은 대학 졸업자에 대한 사회 수요의 증대를 유발시키며 고학력 사회화에 따른 고등학교 등 하위 교육 제도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치닫게 되고, 이에 따라 재수생의 문제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였으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 및 국가 발전의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양적 성장은 자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자연스러운 사회적 요청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분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발전하는 사회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분화는 전문화·다양화를 수반하며 확대와 성장을 의미하고 있음을 생물계는 물론 우리 대학교육의 발전 과정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학과들이 영세화하고 학과간의 협력이 미진한 부문도 있을 수 있다.

우리의 대학교육이 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 향상을 기하지 못해 왔다는 비난도 있을 수 있으나 양과 질은 반드시 상충되는 개념이나 현상은 아니다. 특히 사회가 민주화되어 갈수록 양은 질을 낳는 쪽으로 발전함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음을 우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한국의 대학교육이 얼마나 양적으로 팽창하여 왔는지 1970년부터 5년 단위로 '국민의 학력 구성비'를 살펴 보고자 한다.

국민의 학력 구성비에서 대학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 5.6%, 1975년의 6.7%, 1980년의 8.6%, 1985년의 10.9%로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 분화·확대·발전되어야 할 여지는 다음의 몇 가지 근거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민 학력 구성비 중 1985년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구성비 10.9%는 1981년 미국의 32.2%, 1980년 일본의 14.3%, 1975년 필리핀의 11.9%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태이다.

둘째, 고등교육 기관 취학률로 비교하여 볼 때 1987년 한국이 26.0%인데 비해 1984년 미국이 57%, 1984년 일본이 29.6%, 1985년 아르헨티나의 36.4%에 비추어 취학률에도 성장의 여지는 많은 것이다.

세째, 교원당 학생 수의 면에서는 1987년 한국이 34.5명임에 비추어 1983년 서독은 8.2명, 이태리는 10.0명, 일본은 10.1명, 아르헨티나가 12.0명임을 볼 때 한국의 대학교육 성장은 학교 수, 학생 수의 증가에 불과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네째, 국민 총생산 대 공교육비 비율을 보면 한국(1987)이 3.1%인데 비하여 일본(1982) 5.6%, 이태리(1983)

5.7%, 영국(1983) 5.3%, 싱가풀(1982) 4.4%로 대학을 포함하는 공교육비 비율이 너무 낮은 셈이다.

이와 같이 한국과 몇 나라의 교육 지표를 비교하여 보면 한국의 교육은 나름대로의 팔목 할 만한 성장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아직 양적으로도 더욱 확대·팽창되어야 할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표 1〉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학과 현황

학 과	설 치 연 도 ¹⁾	교 수	인 원	학생 모집 인원 ²⁾	
농학과	1906	7		35	
원예학과	1967	5	12	30	65
임학과	1906	8		40	
임산가공학과	1970	5	13	35	75
축산학과	1937	9		50	
농공학과	농업토목전공	1943	6	33	
	농업기계전공	1967	5	32	65
농화학과	1946	6		40	
식품공학과	1967	6	12	40	80
농경제학과	1946	8		40	
농생물학과	식물병리전공	1946	6	25	
	응용곤충전공	1967	5	25	50
천연섬유학과 ³⁾	1956	6		25	
농가정학과	1959	5		35	
농업교육과	농업교육전공	1962	3	30	
	농촌지도전공	1971	3	30	60
조경학과	1973	5		30	

자료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농학 80년사, 1986 및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요람, 1986~1987.

주 : 1) 설치 연도란의 농공·농생물·농업교육과의 상단은 설치 연도, 하단은 전공 분리 연도임.

2) 서울대학교 1989학년도 대학 신입 학생 모집 요강.

3) 1956년 설치된 잠사학과가 1988년 천연섬유학과로 학과 명칭 변경.

4. 分化·統合의 事例

필자가 근무하는 82년의 역사를 지닌 서울대 농과대학 안의 각 학과별 설치 연도, 교수수, 학생 수는 〈표 1〉과 같다.

크게 보아서 1906년 당시 농과, 임과에서 분화·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1946년 국립 서울대학교가 설립되면서 농화학, 농경제, 농생물학과가 신설되었다. 한 세대 가까이 지난 1967년을 기점으로 농학과

로부터 원예학과, 임학과로부터 임산가공학과, 농화학과로부터 식품공학과가 분화·독립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한 학과내의 전공으로 분리된 농공, 농생물, 농교육의 경우는 학과로 분화·독립된 경우에 비해 교수 인원, 학생 모집에 있어 상대적인 열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분과 내지는 전공 분리가 이루어진 학과와 그렇지 못한 학과와의 격차가 있음도 알 수 있다. 1986~1987년 학과들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세계적 추세가 통합의 경향에 있으니 우리도 통합하여 소위 학부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으나, 이 주장은 퍼는 사람들조차 학부(division) 명칭에의 합의도 이를 수 없었으며, 1960년대로의 퇴행이라는 거센 반발로 좌절되었다.

전공이 분리된 3개 학과의 6개 전공은 세계 유수한 대학의 사례, 학문 분야의 독자성 인정 등 많은 이유를 들어 몇 년째 분과·독립을 신청하여 왔으며, 이때마다 관료적 행정의 타성을 젓은 대학 본부와 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다가 1989년도부터 신입생 분리 모집 정도의 자율화를 인정받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의 사례로는 오랜 역사를 지닌 소위 일류 국립대와 비교적 짧은 역사의 사립대 축산 관련 학과와의 비교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두 대학의 축산 관련 학과 비교는 〈표 2〉에 나타난 대로 학과의 수, 학생의 수

〈표 2〉 '89 학년도 두 대학의 축산 관련 학과 신입생 모집 현황

학 교	학 과	'89 모집 인원	계
△△대	축 산	50	50
○○대	축 산	40	
	축 산 가공	40	
	낙 농	40	
	사료 영 양	40	
	축 산 경 영	40	
	축산(지방)	50	
		250	

에 있어서 1:5의 격차가 있다. 필자가 국내·외의 대학, 연구 기관, 공공 기관, 산업체 현장 등에서 두 대학 졸업생들을 만나 보고 턱득한 사실 중의 하나는 '少數精銳'도 다수에게는 '衆寡不敵'이며, 반드시 소수라야 정예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세째의 사례로는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1970년대 중반부터 한 5년간 수학하며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공업교육, 농업 및 유통, 가정교육 등 6개 학과들이 직업 기술 교육학과로 통합하여 더욱 진밀한 협조를 기대했었는데 몇 년 지난 뒤 나타난 결과의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았다.

① 운영 예산의 삭감, ② 학생 수의 감소, ③ 교직원의 감소, ④ 교과과정의 축소, ⑤ 장학금, 연구비 등의 감소로 연결되고 이에 따라 ⑥ 자체내의 불화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던다는 등 점이다.

이외에도 필자가 보고 들은 분화와 통합의 장·단점에 관한 국내·외의 사례는 많으나

지면 관계상 생략하며 역사적 안목에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보다는 분화쪽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5. 맷음말

맷음말에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소수의 분화 지지 입장에서 있는 분들의 의견을 집약·대변하고자 한다.

첫째, 학과의 통합과 분화를 위한 논쟁에의 노력보다는 교육개혁심의회의 '세계 수준의 대학교육'을 위한 방안에 더욱 큰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여건을 획기적으로 확충시키는 데 우선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사 학과의 통·폐합 조정은 필요성의 인지에서부터 추진 과정이 해당 학과들 선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타학과나 대학, 대학교, 문교부 등의 압력 또는 타율이 작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째, 분화는 등·식물계를 포함하는 인간 사회의 자연적인 현상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가 변화·발전하면서 적종의 수도 급증하여 왔으며(I.L.O.의 보고에 따르면 산업 혁명 당시는 약 400종의 적종이 1945년에는 10,000종, 1965년에는 50,000종, 1974년에는 200,000종으로 증가하였음) 전문화·다양화·민주화·자율화 등이 진전될수록 분화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리라

는 점을 함께 인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네째, 우리 대학교육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몇몇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과 비교할 때 대학교육의 구성비, 대학 취학율, 교원당 학생 수, 국민 총 생산 대 공교육비 비율 등의 측면에서 발전의 여지가 충분하며, 이러한 발전은 통합적 접근보다는 분화적 접근이 더 유리할 것이다.

다섯째, 대학 학부의 통합 또는 분화는 토론자를 포함하는 일부의 논의나 문교부 또는 대학(교) 차원에서의 획일적인 '방침'에 의하기보다는 해당 학과들의 자율적인 과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극단적이고 지나친 분화 또는 통합에는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사회의 발

전 정도, 각 대학(교)의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무리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대학 또는 문교 당국은 해당 학과의 교수, 학생, 동문들의 수렴된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통제보다는 지원 기능을 강조하여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참다운 대학의 발전과 최근 논의되는 대학의 민주화·자율화의 실현은 대학이나 대학교 차원의 통합성에 있기보다는 학과(department) 차원의 특성과 전문성·다양성 등이 존중되는 풍토에서 가능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대학(교), 문교부의 기능과 역할은 각 학과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